

## 광주 도시철도2호선 또다시 '원점으로'

혁신위, 어제 시민단체와 토론회... 트램·BRT 제기  
15년 공론화 과정 불구 '제자리 걸음' ... 시민 혼란

민선 7기 이용섭호의 출범을 앞두고 광주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 방식을 놓고 또다시 시끄럽다.

지난 15년간 찬반 논쟁에 휩싸여 여론이 갈리고 반목이 거듭돼 오고 있는 건설방식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시민들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혁신위 환경교통안전분과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도시철도2호선 건설과 관련, 도시철도건설본부 등으로부터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또 이날 오후에는 도시철도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인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 등과 함께 저심도 방식 대신 트램 도입 등 다양한 의견에 대해 집중토론을 벌였다.

이 모임은 그 동안 경제성 등을 이유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자체를 반대해 왔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비판적 시각이었던 시민모임 변원섭 공동대표가 광

주혁신위에 참여하면서 건설방식에 대한 수정논란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시민모임은 지하철도를 백지화하고, 대안으로 노면전차인 '트램'이나 '땅 위의 지하철'로 불리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Bus Rapid Transit)를 주장했다.

이날 분과위원회에서도 변 공동대표가 나서 도시철도 2호선 저심도 방식의 문제점 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대표는 "앞으로 인공과 자동차가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해보면 땅을 파는 저심도 방식은 경제성과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많다"며 "미래 지향적이고 안전성이 높은 트램이나 BRT 방향으로 가는 게 시대적 흐름에 맞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분과위는 이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한 뒤, 다음주 초 대대적인 시민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결국 이용섭 당선인의 의중에 따라 지하철 방식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

인다. 앞서 이 당선인은 도시철도2호선 건설과 관련, 여러 차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는 의지를 피력해 왔다.

이 당선인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제로 "안전성·재정 적자·기술적 문제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 공론화를 거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반대해왔던 시민모임 대표가 광주혁신위에 참여하면서 2호선 건설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 시민모임 대표가 이 당선자의 정책기조를 결정하는 광주혁신위에 참여할 것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많다.

혁신위 관계자는 "시민모임 대표를 혁신위에 참여시킨 것은 도시철도2호선 건설과 관련해 다양한 시민사회 목소리를 듣겠다는 의지"라며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토대로 시민공청회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로 생각하면 맞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광주국제금형산업전' 개막 미래 첨단 금형기술과 제품을 한 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 '2018 광주국제금형산업전'이 2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됐다.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금형산업전에서는 독일·일본·중국 등 14개국 143개사가 참여해 350개 부스가 운영된다. /광주시 제공

## 지역대학 교육부 기본역량 평가 '희비'

14곳 '예비 자율개선대학' 선정...9곳 2단계 진단 대비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광주·전남 주요 대학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상당수 대학은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돼 안도했지만, 주요 대학 중에서도 일부는 포함되지 못해 비상이 걸렸다.

20일 지역대학들에 따르면 광주·전남·전북·제주 등 호남권역 일반대 23곳 가운데 14곳이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됐다. 전남대·호남대·광주대·동신대·광주여대 등이 포함된 반면, 광주·전남에서는 C대학교와 S·N대학교 등 9곳이 탈락해 비상이 걸렸다.

전문대 중에서는 진단대상 24곳 중 동강대와 광주보건대 등이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됐다.

자율개선대학 선정대학은 정원 감축 없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정원감축 권고 대상에 포함될 경우 대학의 존립이 흔들릴 수 있어 최종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전국적으로는 일반대 187곳 가운데

120곳, 전문대 136곳 중 87곳이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 진단 제외 대학(일반 27·전문 3)을 뺀 나머지 일반대 40곳, 전문대 46곳은 2단계 진단을 받는다.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들은 오는 22일까지 이의신청을 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2단계 평가를 대비한다는 입장이다.

1단계 진단은 최근 3년간 대학의 실적자료를 활용해 대학이 갖춰야 할 기본요소인 교육여건과 대학운영 건전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지원, 교육성과 등과 관련된 정량지표,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진단하는 정성지표에 기반한 진단결과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했다.

1단계 진단결과는 22일까지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진단관 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말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자율개선대학으로 최종 선정된 대학은 정원감축 권고없이 내년부터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정을 지원받는다.

2단계 진단대상은 7월 중 전공·교양 교육과정, 지역사회협력·기여, 재정·회계 안정성 등 대학의 지속 가능성을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1·2단계 결과를 합산해 권역 구분 없이 역량강화 대학, 재정지원 제한대학(유형 I·II)으로 구분해 8월 말 최종 결정된다.

/황애란 기자

### 오늘의 동영상

골드클래스 미드아마 챔피언십 '성료'

### 오늘의 전남매일

- 광역의원 당선인에게 듣는다 ▶3면
- 주52시간 근무 건설업체 '고민' ▶5면
- 무더운 여름 냉·보양식 뜬다 ▶6면
- 불법스포츠포박 기승 ▶8면
- 신창운, 은암미술관 초대전 ▶15면

## 문 대통령, 오늘 러시아 국민 방문

남북러 협력·'나인브릿지' 사업 등 논의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21일부터 2박4일간 일정으로 러시아를 국민 방문한다.

<관련기사 4면>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번 국민방문에서 작년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9월 동방경제포럼에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한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에 이어 국민단상 일정도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 면담은 물론 러시아 하원에서 연설도 예정돼 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러 친선 의회의

밤, 비즈니스 포럼 참석 후 로스토프나 도누로 이동, 2018 월드컵 멕시코와의 조별 예선을 치르는 한국 선수단을 격려하고 경기를 관람할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러시아 방문과 관련, "이번 정상회담은 한·러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며 "양국이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의 협력파트너로서 동북아 평화와 번영, 실질협력 증진을 위한 전략적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방문을 통해 러시아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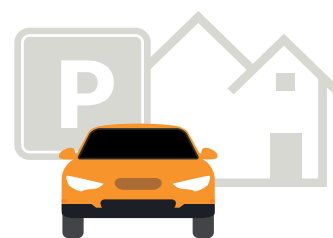


의 경제분야 협력으로 남·북·러 삼각협력 등을 통해 문 대통령의 '북방경제' 구상에 새로운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났다.

또 양국 사이에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분 야 등 '9개의 다리'를 놓겠다는 '나인브릿지' 구상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러 삼각협력 사업은 북미정상회담과 판문점회담으로 추진 여건이 조성됐다"며 "철도·가스·전력 등에서의 협력관계가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 2018년 광산구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수요조사 안내

조사기간 | 2018년 7월 ~ 12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란?

주택이 어떤도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웃간 주차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 내 여유공간 또는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주차장으로 조성시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개인주택** : 주차시설이 없는 주택으로 대문개조, 담장 허물기 등을 실시하여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한 경우 (단, 이미 주차장이 설치된 건물이나 부설주차장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원상회복을 요청하는 경우, 건축법상 규정된 조경면적을 축소(훼손)할 경우는 제외)

**공동주택** :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운동시설, 조정시설, 주택단지인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각각 전체 면적의 1/2 범위 안에서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경우

※ '94년 12월 31일 이전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 건축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전체 입주자의 2/3 이상의 동의, 건축부서의 용도변경 행위허가를 득한 자 (단, 미준공 처리된 공동주택 또는 기존 설치된 주차장의 훼손으로 인한 재설치, 재건축 대상(노후아파트 : 정비구역지정) 아파트는 제외)

### 사업진행 절차

방문 또는 전화접수(관할구청 교통지도과) → 담당공무원 설치가능 여부 현장확인 → 신청서 작성 → 공사시행 및 설치완료 신고 → 보조금 지급

문의 광산구 교통지도과 960-8633



지원 | 설치비의 90% 범위 내 지원 (한도 초과시 추가비용 개인 부담)

공사업종별		지원금액 한도	
개인주택	담장철거·개조 후	서터 설치	2,893,000
		울타리 설치	2,722,000
		미설치	1,332,000
개인주택	대문철거·개조 후	대문 설치	4,050,000
		울타리 설치	2,570,000
		미설치	1,180,000
개인주택	이웃간 담장 철거 후	서터 설치	4,379,000
		울타리 설치	4,207,000
		미설치	2,817,000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여 주차시설 설치		1면당 500,000 (5천원 원 한)	

※ 공사비 총액이 지원범위를 상회할 경우 추가비용은 개인 부담